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내란동조 언론 책임규명 및 올바른 대선보도 촉구 기자회견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일시 및 장소 : 4.28(월) 오후 2시, 언론노조 회의실

▷ 사회 : 김도원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

▷ 순서

1. 언론의 내란동조 책임을 묻는다

— 이호찬 공동대표(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윤복남 공동대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박석운 공동대표(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2. 내란가담, 내란옹호의 기록

— 끝나지 않은 내란동조·선동 보도행태

: 박진솔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 언론내부 내란가담 의혹 진상규명 촉구

: 이희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3. 언론은 대선보도 제대로 하라

— ‘저널리즘 세탁’을 막기 위한 대선보도 10원칙

: 채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언론노조의 제안 ‘2025 대선 취재·보도 이렇게 합시다’

: 김도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실위원장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대선 미디어감시활동 개요

: 신미희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내란가담, 내란옹호의 기록

끝나지 않은 내란동조·선동 보도행태

박진술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12·3 내란 보도는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 주장 받아쓰기 △헌법재판소 흔들기 등의 특징을 띤 내란 동조·옹호 보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내란피의자 주장 받아쓰기

1) 내란범 회견 받아쓰며 확성기 노릇

12·3 내란 핵심 피의자 김용현 측 변호인단은 2024년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취재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언론자유 침해는 물론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골라 내란세력 스피커로 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민언련은 네이버에서 김용현 변호인단이 특정 언론의 취재불허 입장을 발표한 직후부터 기자회견 당일 오후 2시까지 약 2일간 ‘김용현’으로 검색해 모니터링했습니다. 취재불허 문제를 보도한 언론은 41곳인데, 이 중 기자회견 이전에 해당 문제를 비판적으로 지적한 곳은 MBC와 JTBC 등 12곳뿐입니다. 반면, 김용현 변호인단 주장을 그대로 퍼나르며 내란세력 스피커 노릇을 한 언론은 80여 곳이나 됐습니다. 변호인단 의도대로 이들 주장을 검증이나 비판 없이 실시간으로 전한 것입니다.

2) 윤석열 체포 순간까지 ‘윤측’ 받아쓰기 열중

민언련은 네이버에서 윤석열 2차 체포영장 집행시기 첫 보도가 나온 1월 14일 오후부터 윤석열이 체포된 1월 15일 오전까지 약 20시간 동안 ‘윤측’으로 검색해 모니터링했습니다. 총 420건의 보도가 나왔고 이데일리가 19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했습니다.

이데일리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와중에도 <윤 측 “불법 영장...수색 불가”...저지선서 몸싸움>, <윤 측 “전 과정 철저 채증 법적책임 물을 것”>, <윤측 “반국가세력에 나라 장악”> 등으로 윤석열 측 입장을 시시각각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SBS, 헤럴드경제 등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과 불법행위인 체포영장 집행방해를 동일선상에 놓고 공방처럼 전했습니다. 윤석열 체포 순간까지 윤측 보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건 당시 윤석열 대리를 자처한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입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는 “경찰이 대통령 관저에 대량 침입해서 현직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라는 석동현 변호사 주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내란’ ‘쿠데타’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써가며 비난했지만, 언론은 이를 전혀 비판하

지 않았습니다.

2. 내란수괴 윤석열 받아쓰기

1) 연휴에도 계속된 ‘윤석열’ 받아쓰기

민언련은 네이버뉴스 구독자 수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설연휴 9일간 ‘윤 대통령 측’으로 검색해 모니터링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피의자와 옹호자 등의 입장을 전달한 보도는 총 485건으로, 이들이 언론과 마주할 공식 일정이 없는 연휴기간임을 감안할 때 ‘윤석열 측’ 입장을 과도하게 전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한 내용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윤석열과 윤석열 법률대리인단 주장입니다. 세계일보의 경우 <윤측 “공수처, 적법 절차 무시하고 내란몰이 자행”>,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은 구국 결단...검찰, 즉시 석방하라”>, <석동현 만난 윤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인가...헌법상 권한”>, <윤측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인명 사고 한 건이라도 있었나”> 등 각기 다른 제목의 보도를 냈지만 결국 12.3내란은 내란이 아니라는 한 가지 주장을 반복해 받아쓰기한 보도에 불과합니다.

2) 업무정지된 대통령실 받아쓰기

민언련은 네이버뉴스 구독자 수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2024년 12월 15일부터 윤석열 석방 다음 날인 3월 9일까지 85일간 ‘대통령실’로 검색해 기사 1만 8,009건을 분석했습니다. 뉴시스, 연합뉴스, 뉴스1 등 뉴스통신사가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실 보도를 가장 많이 했고, 보도전문채널 YTN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목만 살폈을 때 대통령실이 전하는 윤석열 발언에 따옴표만 붙여 그대로 기사화한 보도는 829건입니다.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과 뉴시스1, 연합뉴스, 뉴스1 등 뉴스통신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에도 시시때때로 윤석열을 대변했습니다. 직무정지된 윤석열을 대통령실이 나서서 옹호할 때마다 언론은 비판 없이 받아쓰기에 급급했습니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직후 대통령실이 법률을 따르지 않고 직무정지된 윤석열을 보좌하는 직무를 버젓이 하는데도 YTN <대통령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환영...조속한 복귀 기대”>, TV조선 <대통령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환영...조속한 복귀 기대”>, 연합뉴스 <대통령실 “윤대통령 구속취소 환영”...정진석, 서울구치소서 대기> 등과 같이 받아쓰기에 골몰했습니다.

윤석열 석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YTN <“성경 많이 읽었다” 김치찌개 먹으면서 구치소 후기 전한 윤석열 대통령>, TV조선 <윤 “대통령실, 국정 중심 잡아야”...관저서 김 여사와 ‘김치찌개’ 식사>, 뉴시스 <윤, 관저 복귀 후 김치찌개로 저녁 식사...“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게 많은 곳”> 등과 같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한 윤석열의 신변잡기를 그대로 받아서 보도했습니다.

3. 헌법재판소 흔들기

1) TV조선과 조선일보의 ‘헌재 흔들기’

민언련은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3명의 회피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2월 1일을 기준으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와 신문 지면기사를 각 4일씩 모니터링했습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재판관 개인 성향이 탄핵심판 쟁점이라도 되는 양 관련 보도를 쏟아내며 현재 흔들기에 몰두했습니다.

TV조선은 2월 1일 <“재판관 스스로 빠져라”...의견서 제출>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며 “탄핵심판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선일보는 2월 4일 사설 <현재의 거듭되는 경솔하고 정파적인 행태>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인용을 결정한 재판관 4명은) 모두 민주당 측이 추천한 사람”으로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민주당이 파견한 정당원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관 모두 민주당 측이 추천한 사람이라는 조선일보 주장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삼권분립을 무시한 명백한 왜곡입니다.

2) 국민의힘 논평에 7배 늘어난 문형배 권한대행 허위정보 보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관련 허위정보 보도도 현재 흔들기에 주효했습니다. 민언련은 네이버에서 허위정보가 처음 보도된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문형배 카페’로 검색해 모니터링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 허위정보 확산 기사는 249건, 허위정보 정정 기사는 84건 보도됐습니다. 허위정보 확산이 허위정보 정정보다 약 3배나 더 많았습니다.

2월 11일 2건으로 시작된 허위정보 확산 기사는 2월 13일 157건을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극우커뮤니티, 뉴데일리·더퍼블릭 등 극우매체, 고성국TV·가로세로연구소 등 극우유튜버를 통해 확산된 허위정보를 바탕으로 문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한 날이 바로 2월 13일입니다. 짜깁기와 허위조작을 통해 현재를 흔들려는 의도가 다분한 허위정보였지만 상당수 언론은 검증이나 비판은커녕 국민의힘 입장을 주로 실으며 허위정보를 확산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4. 제언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시사대담프로그램에는 여전히 내란을 옹호했던 인사들이 출연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는 내란옹호·선동에 앞장선 극우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당의 원내대표와 대선주자는 특정매체 비하, 무응답, 심지어 기자 폭행에도 뻔뻔했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원에 출석하고 재판장 촬영도 불허됐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법정촬영 일부가 허가됐지만, 그마저도 윤석열은 뒷줄 맨 안쪽에 자리했습니다. 윤석열만 특혜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지적·비판하는 언론이 드물다는 점입니다. 언론의 침묵은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내란종식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란세력에 맞서는 보도이며 민주주의에 기초한 비판 정신입니다.

민언련은 대선기간에도 내란동조·옹호에 앞장섰던 언론을 포함해 언론 전반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며 언론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언론계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이희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윤석열이 발령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언론과 관련하여,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과 6월 국방부 회의에 참여하여 국가 위기 상황 발생 시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으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방송사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방송 계획을 사전 심의한 뒤 방송 가능 여부를 통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지난해 6월은 윤석열이 안가회동을 통해 계엄군 수뇌부에게 비상대권을 언급하는 등 사실상 계엄을 모의한 시점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당시 국방부 회의 참석 등을 통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를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방심위는 민주노총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의결을 촉구하도록 만든 문자행동 사이트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만장일치 의결을 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문자행동 사이트가 당시 예정됐던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민주노총에 '즉시' 삭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 스스로 배포한 명함을 통해 공개된 휴대전화 번호들은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내란이라는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역사적 의결을 앞두고 성난 민심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행위를 부당한 압박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국민의힘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 범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들의 악행을 바로 잡고 국가의 기능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리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했기 때문이다.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 의결에 불참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민심을 전달하는 일을 방해하는 조치는 이 또한 헌정 파괴 내란에 대한 동조이고 부역 행위이다.

윤석열이 계엄 당일 발표 전 국무위원들에게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말한 사실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진술로 확인되었다. 대통령실이 계엄 발표 2시간 전쯤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통해 계엄방송을 준비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전모가 드러난다면 이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내란에 가담한 행위이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내란사태 내내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의 보도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

하다. 12월 3일 시급을 다투는 순간부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죄 성립에 대한 의미 있는 보도보다는 여야 균형을 맞춘다는 형식 논리와 기계적 균형을 빌미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의 비겁한 변명과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란 동조 발언을 검증 없이 보도해 왔다.

계엄 이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로만 구성하여 불법, 파행으로 운영하면서 방송 장악의 노골적인 의도를 숨기지조차 않던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하고 비판적 언론인들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언론을 직접 통제의 대상으로 삼을 방안을 획책했다.

이렇게 언론 자유 자체에 적대적이었던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동조한 언론계 내부의 가담자, 부역자, 방관자는 스스로 존재 의미를 내다 버린 자들이다. 류희림처럼 온갖 악행을 벌인 뒤 뒤늦게 도망간다고, 의혹을 받는 일부 언론인들처럼 극구 부인한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언론계 내의 내란 가담자들도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힌 후 처벌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자들은 진실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며 자숙함이 속죄의 시작이고 죄에 대한 정상참작을 구할 방법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도 원칙을 제안하며

채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2025년 6월 4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역동적 민주주의 대한민국 시민을 함께 맞이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번 대선 보도에 임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정권이 짓밟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87년 체제 한계를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역사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보도 원칙’을 제안한다.

언론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발언권을 허용해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 탄핵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 언론은 12·3 내란사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은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상황에서도 중립과 균형이란 이름 아래 제대로 감시도 비판도 하지 못했다. 내란 이후에도 헌정파괴 세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혐오가 가득찬 극우의 언어를 배설할 때, 이를 중계하면서 탄핵정국을 혼란과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언론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을 ‘정상적인 정치집단’으로 포장하고 세탁하는 기제가 되어선 안 된다. 언론이 헌정파괴 세력을 정상화하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정치적 행위로 인정받게 되고, 국민의 심판도 무력화될 수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과 이를 회복하려는 세력을 동일하게 여겨 찬반양론으로 나열하고 파괴 세력의 해명을 중계하면서 검증 없는 인용, 반민주적 담론의 재생산으로 나아가는 것이 언론의 세탁 과정이었다.

이번 대선 보도는 언론의 이런 세탁 기제를 철저히 해체하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실천적 저널리즘으로 거듭나야 한다. 언론은 특히 형식적 균형 보도, 검찰발 받아쓰기, 사실 검증 없는 중계, 극우 담론 재현 등을 통해 헌정파괴 세력을 정상화하고 정치적 책임을 희석시키는 보도를 끝낼 것을 국민과 약속하여야 한다.

12·3 계엄령 기도, 사법부 침탈, 국민주권 무력화 등 일련의 사태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형식적 민주주의 외피에 의존할 수 없는 내란적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정치적 선택의 기회가 아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재구성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인식해야 한다.

언론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의 주체로서 선거 보도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대통령 선거 보도 7원칙을 제안하며, 모든 언론이 성실히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1.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동등성 원칙 거부

헌정질서를 부정한 세력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2. 기계적 중립성과 형식적 공정성 원칙의 폐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위기 속에서 기계적 중립성과 형식적 공정성은 무력하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저널리즘 실천이 요구된다.

3. 사실 검증과 왜곡방지 보도의 강화

사실을 검증하지 않은 중계보도는 왜곡과 혐오차별의 언어를 확대하고 정치세탁에 일조하는 행위다.

4. 폭정과 내란의 피해를 기억하고 복원하는 보도의 우선성

이번 선거는 폭정과 내란사태로 무너진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계기이자 공간이다.

5. 극우 담론, 음모론, 혐오차별 발언의 거부

극우 언어와 극우 프레임은 거부와 해체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결코 중계하거나 재현하지 않는다.

6. 디지털플랫폼의 민주주의를 위한 책임과 언론의 감시

허위조작정보 차단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을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언론은 디지털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디지털플랫폼은 자율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해야 한다.

7.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과 새로운 정치를 위한 보도

이번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자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언론이 7개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단지 선거를 보도하는 수동적 중계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재구성을 위한 적극적 실천자가 되기를 요구한다. 헌정질서 회복의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는 언론은 공적 기관으로서 존립 근거를 가질 수 없다. 언론은 지금, 민주주의와 헌법의 편에 설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 선택해야 한다.

2025 대선보도 이렇게 합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2025년 4월 28일

제정 배경

이번 21대 조기 대선은 현직 대통령의 내란 시도와 탄핵으로 비롯된 예외적인 선거입니다. 촘촘한 일정을 따라가야 하는 선거 취재·보도 일정은 이러한 배경을 잊게 만들기 쉽습니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눈앞에 보이는 유권자와 경쟁 후보만을 생각하고 술한 발언과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이 선거에 나오게 된 맥락에는 침묵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는 21대 대선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 내란을 획책한 전 대통령의 12.3 계엄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에 따른 선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아래와 같이 2025년 대선 보도 준칙을 제정합니다.

1. 12.3 내란을 옹호하고 대통령 파면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은 단호히 비판합니다.

일부 정당과 후보들은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깎아 내리기 위해 계엄의 원인을 왜곡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호히 비판해야 합니다.

2. 제목이나 자막만 보는 독자가 있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허위사실, 잘못된 주장이 분명하다면 제목과 자막으로 분명히 밝혀줍니다. 기사 본문에서 밝히는 것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외신들은 제목에서 'falsely claims'와 같은 문구로 근거 없는 주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주장을 단순 인용하는 제목으로 언론이 본의 아니게 허위정보나 선동을 퍼뜨리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유튜브, SNS, 인터넷 커뮤니티 콘텐츠의 단순 인용 보도를 자제합니다.

이용자가 직접 볼 수 있는 대선 관련 온라인 콘텐츠를 인용하더라도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 메시지의 의도는 무엇인지, 메시지 전달의 배경은 무엇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인용보도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언론사별로 차별화된 보도가 이뤄져야 합니다.

12.3 내란을 옹호하고 사법부 폭동을 조장한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의 무비판적 인용 보도는 자제합니다.

4. 폭로성 주장의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사후에라도 검증해 보도합니다.

선거 기간 유세나 기자회견 중 즉흥 발언에는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주장이 포함되어 후보 간 비방전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도해야 합니다. 특히 폭로성 주장은 기초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 및 교차 검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뒷받침되는 의혹은 적극 취재합니다. 후보와 특수관계인의 공직 관련 권한 남용,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결정 등 사실 관계의 확인이 가능한 의혹은 적극 취재하고 보도합니다. 후보 관련 의혹을 검증하는 보도에서는 취재원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취재원의 인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에 한하여 익명으로 보도합니다.

5. 여론조사 보도는 단순 인용 보도보다 설명과 해설을 지향합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 뿐 아니라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독자·시청자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보도는 지지율, 선호도, 당선가능성 등 무엇에 관한 조사인지를 제목에 명시합니다. 각종 지표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고, 우위나 열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의 지역별, 연령별 등 조사 결과는 표본수가 줄어들어 오차범위가 커지고, 가중치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정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조사인지, 표집 방식은 적절한지, 지나치게 이례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6. 선거운동을 전쟁이나 도박에 비유하는 표현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격전’, ‘결투’, ‘대첩’, ‘공세’ 등 선거를 전쟁에 비유하는 용어는 진영 간 대립과 정치적 갈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숙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울인’, ‘판돈’처럼 선거를 도박에 비유하는 등 선거를 희화화하는 표현의 사용도 피하고 대안을 고민합니다.

7. 내·외부의 압력 등 보도·제작 자율성 침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 자정선언(강령) 1조는 ‘우리는 어떤 내외부의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언론자유 수호에 앞장선다’고 명시했습니다. 모든 조합원은 2025년 대통령 선거 보도에서도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선거보도 심의기구나 정치권에서 정당한 보도를 문제삼을 경우 자사 보도가 아니더라도 함께 대응합니다.

※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민, 문제점, 그 밖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소속 노동조합 또는 언론노조 민실위(dohwon@media.nodong.org)로 알려주십시오.